

한중경제포럼

제13-02호 2013년 4월 25일

중국 양회에 나타난 정책 동향

2013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 양회에 나타난 정책 동향
2. 일 시 : 2013. 3. 27(수) 16:00~18:00
3. 발표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순쉐궁(孙学工)

1. 경제 발전 정책

가.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을 제시

-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2012년의 실질성장률인 7.8%보다 0.3%포인트 낮은 7.5%이며, 이는 전년도 성장목표치와 동일한 수준(7.5%)을 유지한 것임.
- 2013년 성장목표 설정을 위한 내부 토론과정에서 '12·5' 규획에 제시된 성장목표와 동일하며, 중국은 GDP 성장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로 7%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잠재성장률에 맞춰 7.5%로 조정함.
- 또한 이는 약 4.3%의 등기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량의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과 민생개선 요

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며, 안정적인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 유지에 유익함.

- 최근 중국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고, 중국 경제위기 발생과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7.5%의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은 새 정부가 여전히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중요한 임무로 삼을 것이고, 지도층의 교체로 인한 정책방향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임.

<표 1> 최근 주요정책 목표 비교(2009~13년)

항목	2013년 목표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GDP 성장률	약 7.5%	7.8%	7.5%	9.2%(47조 1,564억 위안)	약 8%	10.4%(40조 1,202억 위안)	약 8%	8.7%(33조 5천억 위안)	약 8%
CPI 상승률	약 3.5%	2.6%	약 4%	5.4%(식품가 11.8% 상승)	약 4%	3.3%(식품가격 7.2% 상승)	약 3%	-0.7%	약 4%
재정 수지	1조 2천억 위안의 적자(중앙 재정 적자 : 8,500억 위안)	5년 사이 공공재정 소득이 5조 1천억 위안에서 11조 7천억 위안으로 증가	8천억 위안의 재정 적자(중앙 재정 적자: 5,500억 위안)	전국 소득: 10조 3,740억 위안, 지출: 10조 8,930억 위안	재정 적자 9천억 위안(전년대비 1,500억 위안 감소, 적자율이 2%로 하락)	소득: 8조 3,080억 위안(21.3% 증가), 지출: 8조 9,575억 위안(17.4% 증가)	1조 500억 위안의 재정 적자	소득: 6조 8,500억 위안(11.7% 증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 5,700억 위안의 적자 증가, 구조적 감세 실시
취업 촉진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도시 등 기실업률 4.6% 이내	도시 신규 취업자 1,266만 명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도시 등 기실업률 4.6% 이내	도시 신규 취업자 1,221만 명	재정투입: 423억 위안,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n/a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도시 등 기실업률 4.6% 이내	426억 위안의 전 국민 자금 투입(전년대비 59% 증가)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도시 등 기실업률 4.6% 이내
삼농 (三農) 투입	"삼농"에 대한 투입 지속적으로 확대, 18억 무(亩) 경작지 레드라인 고수	5년 내에 4조 4,700억 위안 지출(연평균 23.5% 증가)	중앙에서 1조 2,287억 위안 투입	1조 408.6억 위안 지출	9,884.5억 위안 투입	8,183억 위안, 월신 초월	8,183억 위안 투입	중앙에서 7,253억 위안 지출	7,161억 위안 투입
사회 보장	사회보장커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도농 기본 양로 보험 전면 보급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산농 혼합작보	산농 혼합작, 도시 사회보험 사범 가	신형 농촌 사회 양로 보험 시범	2조 5,707만 명이 도시 직원	신형 농촌 양로 보험 시범 범위	사회 보험 기금 6,927억 위안	중앙에서 2,930억 위안의 사회보험자

	양로금 지속적으로 10% 인상	보험 가입 인수 7.9억 명 기록	기준 일인 당 매년 240위안 으로 인 상	입인수: 3.64억 명 기록, 여 명 이상의 인구가 양 로금 수령	범위를 전국 40% 의 현(縣) 으로 확대	기본 양 로 보험 에 가입	를 전국 23%의 현(縣)으 로 확대	(44.2% 증가)	금 투입 기업 연 평균 10% 상승
--	------------------------	--------------------------	-------------------------------------	---	----------------------------------	----------------------	-------------------------------	---------------	------------------------------

나.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效益) 향상

□ 고도화된 중국경제 구축에 포함된 내용

- 거시경제의 안정화
- 구조조정
- 환경 개선
- 공평한 사회
-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 중국경제는 여전히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성장의 질과 효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임.

다. 물가상승률 목표치의 하향 조정

□ 물가상승률 목표

- 2013년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5%로 전년대비 0.5%p 하향 조정한 것임.
- 단, 2012년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이번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향 조정이 긴축 기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하향 조정 원인

- 글로벌 양적 완화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음.
- 가격개혁을 위해 일정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향후 많은 영역에서 가격 정비가 필요함.

라. 재정정책의 적극성 제고(财政政策的积极度有所提高)

□ 2012년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 재정적자 예산은 1조 2천억 위안(2012년 8천억 위안)으로, GDP 대비 적자율이 2012년의 1.5%에서 2%로 상승함.
- 계속하여 구조적 감세를 실시하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범위를 확대함.
- 민생지출 확대는 비탄력적임(有刚性). 사회보장이나 국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정부투자는 여전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중앙 예산 내의 투자는 4,376억 위안으로 2012년의 4,026억 위안을 상회함.
 - 지방정부의 신규 채무도 3,500억 위안으로 2012년의 2,500억 위안보다 대폭 증가함.

마. 온건하면서도 강도 있는 통화정책(货币政策稳健中不失支持力度)

□ 더욱 온건한 추세의 통화정책

- M2 증가율 목표는 2012년의 14%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된 13%임.
- 하지만 M2 증가율 목표치 하향 조정이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역할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번 양회에서 “통화 대출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사회 융자 규모를 적절히 확대시킨다”고 밝혀 2013년도 통화정책이 심한 긴축기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바. 도시화 추진

□ 2013년 양회의 새로운 중점 포인트

-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도시화 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리커창 총리가 직접 주관함.
- 특대도시와 대도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과급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 중소도시와 소성진(小城镇)은 산업발전, 공공 서비스, 고용창출, 인구집중 기능을 강화함.

- 호적제도, 사회관리 시스템 및 관련 제도 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농업인구의 도시시민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인프라 공공 서비스의 보급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위한 공정한 제도 환경을 구축함.
- 기존 중국경제는 내수부족, 생산력 과잉 등 문제가 돌출함. 도시화 추진을 통해 내수확대와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화는 단순한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 시스템, 사회보장 등을 비롯한 사회제도 구축과 더욱 깊이 관련된 문제임.

사. 부동산시장 조정 강화

□ 부동산시장 조정과 보장성 주택 건설 강화

- 투기, 투자성 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업무 책임제와 부동산 시장 조정 정책체제를 완비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함.
- 보장성 주택 건설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
 - 2013년 도시의 보장성 주택의 완공과 신규 착공 규모는 각각 470만 채와 630만 채임.
 - 농촌의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危房)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아. 리스크 방지 강화

□ 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

- 최근 국제적으로 중국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많고 은행 부실채무, 국부적인 지역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위기가 발생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고 리스크 방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준
- 시스템적이고 지역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저선을 지킴.
-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국부 및 지역적인 리스크와 금융기관의 부외거래(表外业务) 리스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금융지원을 향상시킴. 예컨대 2012년에 활성화되었던 은행의 재테크 상품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됨.

2. 주요 개혁 어젠다

가. 개혁개방 추진의 심화

□ 과감하고 지혜로운 개혁 추진

- 중국의 신지도부는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문제임.
- 특히 1980년대처럼 한 가지 중점 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방향을 찾기 어려워졌음.

□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완비

- 동요 없이 공유제 경제를 공고하게 발전시키며, 비공유 경제발전에 대한 장려, 지원, 유도를 통해 각종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동참하며, 동등한 법률 보호를 받도록 시스템 환경을 구축함.
- 국유기업의 개혁과 중점산업 개혁을 심화함.

나. 재정과 세무 시스템 개혁 가속화

□ 재정과 세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권한과 행정권한 관계를 정비하고, 공공재정 시스템을 완비함. 지방정부의 많은 행위는 기존의 재정 및 세무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됨.
 - 일례로 현재 지방정부가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특히 산업발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바로 기존의 재정 및 세무 시스템과 관련됨.
- 구조 고도화와 사회정의에 유리한 조세제도 구축을 촉진해야 함.

다. 금융시스템 및 가격 개혁의 심화

□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

- 실물경제 발전을 통한 현대 금융시스템 완비
- 은행, 증권, 보험산업 경쟁력 향상
- 다원화된 자본시장 발전의 가속화
-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 추진
- 위안화의 해외 사용을 확대
-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의 점진적인 실현
- 투자와 용자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가격 개혁을 추진하며, 자원성 제품 가격형성 시스템의 건전한 형성을 유도함. 일례로 최근 NDRC는 과거 22일의 유가 조정주기를 10일로 변경하였음.

라. 소득분배제도 개혁

□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개혁

- NDRC에서 수년에 걸쳐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와 관련된 의견을 작성하였고, 현재 수정작업 중에 있음.
-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 제정하여 확실한 제도 확립과 정책 실시를 통해 소득분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여, 전 국민이 더 많이 더 공평하게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함.

3. 2013년 경제성장 전망

가. 안정적인 경제성장

□ 펀더멘털 요인에서 보면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1월과 2월의 경제성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임. 2012년 3/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7.4%로 최저점을 찍고 4/4분기에 7.9%까지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며, 2013년 1/4분기는 7.9%로 예상됨. 이런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점진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2012년에 예상치 못했던 요인이 있음. 예컨대 2012년 7%에 불과하였던 수출증가율이 2013년에는 20%까지 상승하였음.
- 또한 2012년 예상과는 다르게, 지난 1월과 2월에 소비증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지도부 형성 이후 발표된 공무원 경비절약 및 접대사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가지 규정(八项规定)’ 시행에 따른 공무원 소비 감소에 기인함.
- 2013년에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2012년의 정책 지원 강도를 유지할 것임.
- 해외경제 환경에 대한 예측이 대체적으로 호전됨.
-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이번 양회에서 설정된 성장 목표치인 7.5%보다 높은 8% 내외로 예상됨.

나. 리스크

-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방정부 채무, 새도뱅크, 생산력 과잉, 부동산 등을 들 수 있음.
- 단, 이상의 리스크는 여전히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음.

다.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 정책에 대한 경제성장의 의존도가 여전히 비교적 높음.

- 중국경제 성장은 대부분 정부투자, 인프라 시설 투자 등 정부의 경제활동에 힘입은 것이며, 2012년 경제가 하강에서 상승 국면으로 호전된 것도 역시 정부 투자에 기인한 것임.
- 즉 1980, 1990년대의 일본처럼 지금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성장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 내생적인 성장동력 부족이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질의·응답>

질문 1.

첫째, 최근 일부 학자들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파워가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하면서 체제개혁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NDRC의 기능 역할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지? (즉, NDRC 내부 개혁 방향의 유무) 둘째, 최근 ‘국오조(國五條)’를 발표하였는데 명확한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과연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오조’의 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

답변 1.

NDRC의 체제개혁은 NDRC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지도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였을 것임. 올해 초에 NDRC 내부에서 개혁 의향 관련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차원의 개혁조정 전문위원회 설립을 건의한 적이 있음. 즉 NDRC에서 개혁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님.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지도층에서 확정하는 것임. 현재 개혁 여부의 불확실성은 사실상 11차 3중 전회 때처럼 명확한 개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만약 올 10월에 개최될 18차 3중 전회에서 개혁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개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설사 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당 차원에서의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음.

사회에서 NDRC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임. 그 원인을 보면, NDRC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요금 등 가격을 조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독점 산업에 대한 가격관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함. 가격 조정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양측 모두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불만이 더 큼. 일전에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 똑같은 날에 유가를 조정한 적이 있음. 당시 대만은 유가를 하향 조정한 반면에 대륙은 유가를 상향 조정하였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 대륙 국민은

NDRC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였음. 그러나 대만은 대선 이후에 유가를 하향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 역시 대만 네티즌으로부터 많은 비평을 받은 사실이 있음.

사실 NDRC는 가격조정 역할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가격조정에 대해서만 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분은 홀시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은 자국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음. 만약 NDRC에서 거시조정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성장은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임. 횡적으로 비교해보면, 특히 금융위기 이후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 세계 다른 나라를 훨씬 상회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내린 결정들이 모두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틀린 결정이라면 지금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임. 물론 NDRC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런 개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님. 형세와 상황에 대응하여 동태적인 조정이 필요함.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기에 대응하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안정을 회복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복귀해야 함. 즉 지금 위기대응 메커니즘에서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함.

‘국오조(부동산시장 조정)’와 관련하여 사실 부동산 문제는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사회 모순이 집중된 사회구조 문제라고 생각함. 시장에 대해 조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동 시장의 버블 유무부터 판단해야 함. 버블이 확실히 존재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정해야 하지만 버블이 없을 경우 시장 자체를 통해 조정할 수밖에 없음. 현재 중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버블은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물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버블 유무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중국 부동산시장의 레버리지율은 높은 수준이 아님. 이 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의 미국과 전혀 다른 것임. 직접 단번에 현찰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20, 30년의 대출을 5, 6년 내에 모두 상환하는 사전 상환 케이스도 아주 많음. 즉 기존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실제 구매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됨.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빈부격차의 확대임. 고소득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해도 여전히 구매력이 있지만, 저소득자는 부동산가격이 20~30% 하락할 경우 구입 능력이 없음. 즉 사회구조 모순의 심화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어려운 문제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부동산시장 조정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회모순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① 공공임대주택 등을 비롯한 보장성 주택 건설, ② 부동산세 시범 실시 같은 고소득계층에 대한 중과세 제도실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런 두 가지 조치는 장기적인

조치이며, 현재 이 두 가지 조치의 강도나 실시범위는 아직 미약한 상황임. 실시 강도를 높이거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 2.

양회를 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함. 개인적으로 이번 양회를 중국 과거 30년의 성장 패러다임 진화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 즉 국가주도, 수출, 투자 견인의 성장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개혁, 즉 ① 농민공의 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 ② 정부와 시장 관계 변화, ③ 소득분배를 통한 민생개선 등에 대한 개혁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런 개혁의 전제는 바로 개혁의 보너스(배당금)가 신속하게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임. 과거 한국의 수출경제 전환 과정의 경험에 따르면 개혁의 보너스보다 개혁의 코스트가 더 빨리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농민공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개혁의 보너스인 소비확대가 나타나기 전에 개혁의 코스트인 지방재정 부담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것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개혁에 코스트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도시화와 관련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

답변 2.

현재 개혁 추진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개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즉 기존의 기득권자와 이익패턴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개혁 초기 파레토 개선처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혁을 찾기 어려움. 예컨대 대학입시시험 개혁에 있어, 많은 외지 학생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 개혁은 현지 학생의 대학입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지 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지금 거의 모든 개혁이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개혁의 코스트는 아주 명확하지만 개혁의 보너스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 추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독점산업에 대한 개혁 방식 중 하나로서 한 개 기업을 여러 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기업 분할 방식을 생각해보면, 동 방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업분할 자체의 코스트가 비교적 큼.

특히 중국과 같은 ‘관본위(官本位)(벼슬의 높고 낮음이나 권력의 대소를 사회가치의 계산 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함)’ 체제하에서 하나의 장관급 기관을 여러 개의 기업으로 분할하게 되면 사무실, 인력자본 등의 측

면에서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지만 경쟁관계 형성을 통해 효율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왜냐하면 개혁의 보너스는 시장환경, 기술력 등과도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임. 예컨대 10여 년 전부터 논의된 전력시장 개혁에 있어서, 복잡한 전력시스템 설계로 인해 전력 조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음.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전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현재 상황에서 과연 가격 하향 조정과 효율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움. 특히 안전요구가 높은 전력망에 대한 기술개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논의한 지 10여 년이 되지만,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즉 어떤 개혁은 추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개혁 자체의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보너스가 코스트보다 현저하게 큰 개혁은 과거에 이미 추진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개혁과제는 큰 어려움이 있거나 보너스가 명확하지 않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지금 중국은 개혁 초기보다 생활조건이 많이 개선된 상황이므로, 개혁의 동력이 감소한 원인도 있음. 모순이 심화되고 어려워진 후에야 개혁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음.

도시화 로드맵이란 도시화 계획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2012년에 작성 완료하였지만 비교적 많은 수정이 필요해서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구체적인 발표 시간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3.

지금 중국의 개혁에 있어 시장 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즉, 독점산업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독점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답변 3.

중국은 제조업 부분에서 이미 상당한 개방수준을 이룸.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서비스업 개방은 양국의 상호 개방과 관련되고 협상 과정에서 흥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다른 국가에 대해 능동적, 일방적 개방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상황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제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

리커창 총리는 향후 중국이 서비스업 개방을 계속하여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현재 중국 서비스업 규모는 4조 달러에 달하지만, 서비스업 무역은 4천여억 달러에 불과하여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따라서 서비스업은 향후 중국이 중점적으로 개방하게 될 영역이라고 판단됨.

질문 4.

사모펀드 투자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NDRC는 지방의 PE 주관부서에 6월 말까지 PE 등록 관련 실시세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하였음. PE 관련 법률 제정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고,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2012년에 ‘증권투자 펀드법(证券投资基金法)’ 수정 시 상장 계획 중인 회사에 대한 재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동 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PE 규모는 정부에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8천억~1조 위안 규모로 추산됨.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대해 NDRC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답변 4.

PE 관리 시스템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며, PE는 금융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관리는 NDRC의 담당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함. PE 투자사업은 NDRC와 일정한 관련이 있지만, 리스크 평가와 통제 등에 대한 감독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임. 물론 어느 부서가 담당하든 PE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것임. 이 역시 더 적절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구축과도 관련이 있음. 정부에서 모든 분야를 총괄 관리한다는 비평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산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감독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함.